"지금 시대정신은 격차해소···대표 되면 지역차별 꼭 없앨 것"

새누리 7·14 전대 당권 도전 나선 김무성 의원

새누리당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7·14 전당 대회가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7·14 전당대회는 박근혜 정부 2기의 당 청(黨靑) 관계를 재정립하고, 2016년 국회의원 총선 공천권의 향배를 결정하는 무대가 된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세월호 참사와 잇따른 인사 참사 등으로 민심 이반이 가시화되고 있는 여권의 위기 상황에서 당권 도전에 나서는 김무성 의원은 과거 민추협 (민주화추진협의회) 시절부터 호남에 대한 깊은 애정을 보여온 인물이라는 점에서 지역민의 관 심도 높다.

광주일보는 새누리당 전당대회를 앞둔 10일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김무성 의원을 만나 당권 도전의 포부와 비전 등을 들어봤다. 다음 은 일문일답.

-강력한 대권 주자로 꼽히면서도 당권 도전 에 나선 이유는.

▲지금은 여권의 위기 상황이다. 누가 당의 얼굴이냐에 따라 앞으로의 선거에 영향을 미친 다. 현재로선 김무성의 얼굴이 다른 후보들에 비해 국민에게 더 믿음과 신뢰를 줄 것으로 보 고 있다. 대권 주자 얘기가 있는데 대통령은 하 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오직 국민이 정해 주는 것이다. 지금은 오직 당 대표가 되어 정당 민주주의 실현에만 집중할 생각입니다.

-당권 주자로서 내세울 수 있는 경쟁력과 비

▲정치가 그동안 국민의 혐오와 지탄의 대상 이 되고 신뢰를 잃은 것은 정당이 비민주적으로 운영된 데 있다고 본다. 모든 악의 근원이 공천 권이다. 그동안 소수 권력자와 그룹이 공천을 빌미로 농단하는 경우가 많았다. 저도 두 차례 나 피해자가 된 바 있다. 공천권을 국민과 당원 에게 돌려 드리면 정당이 활기차게 변하고, 국

공천권 국민·당원에 돌려주고 활력 넘치는 새누리당 만들 것

민의 목소리가 잘 반영돼 결국 국민으로부터 신 뢰를 얻을 수 있다고 자신한다.

-새누리당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보나.

▲앞서 말했듯이 당내에서 정당 민주주주의 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소수 권력 자의 눈치만 보는 실정이고, 당이 활력이 없다. 대표가 된다면 당권의 권(權)자를 당원에게 돌 려드려 활력 있는 새누리당을 만들겠다.

-전대 의미를 '과거냐 미래냐의 선택'이라고 했다. 대한민국의 고질병인 지역차별 극복도 과 제 아닌가.



▲저는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은 '격차해소'라 고 생각한다. 빈부간 격차, 세대간 격차, 대기업-중소기업간 격차 등도 있고 특히 지역 경제간 격 차가 심각하다. 이런 격차를 줄여야 대한민국이 발전하고, 선진국으로 뻗어나갈 수 있다는 게 소 신이다. 출마선언문에도 '국민이 편안하고 지방 도 골고루 잘 산다'는 의미의 '안민부방(安民富 方)'을 강조한 바 있다. 당 대표가 되면 지역 격차 와 차별을 해소하는 데 당력을 모을 생각이다. 특히, 인사 탕평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겠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당시 '호남의 눈물을

朴대통령 호남 배려 아쉬워 '임 행진곡' 기념곡 지정 시급

닦아주겠다'고 했는데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는

▲국민대통합을 위해 인사탕평을 하는 게 좋 았는데, 노력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냐는 생각이 다. 다만 박 대통령도 늘 호남에 대한 관심을 기 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차근차근 풀어갈

-당 대표가 된다면 청와대 및 야권과의 관계 설정은 어떻게 할 것인지.

▲우선, 건전한 견제의 기능이 살아있어야 당 청 관계가 건강해진다. 야권과는 소통으로 풀어 가겠다. 과거 원내대표 시절 박지원 원내대표와

참 대화를 많이 했다. 다른 야권 의원들과도 얘 기를 많이 나눈다. 야당 국회의원들도 모두 나 라를 위해 애쓰시니, 충분히 소통할 수 있다.

-호남과의 인연이 있다면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정치 참여에 결정 적 계기가 됐다. 당시 선친은 전남방직을 운영 하고 계셨다. 전남방직 관계자 등을 통해 광주 민주화운동의 참혹함을 확인하게 됐었다. 이 나 쁜 놈들 이럴 수 있느냐며 분노했으며 정치에 참여하게 됐다. 사업을 정리하고 숨어서 민추협 활동을 했는데 많은 고초도 겪었다.

-올해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도 '님을 위 한 행진곡'이 제창되지 못했다.

▲안타까운 일이다. 제가 지난해에도 제창돼 야 한다고 거듭 강조한 바 있지만 정부가 전향적 으로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 노래 어디에도 종북 의 의미가 없다. 국회 결의까지 이뤄진 상태에서 제창이 안 된다는 것은 어떠한 설득력도 없다.

-광주·전남지역 새누리당 당원들은 척박한 정치적 환경에서 많은 고생을 하고 있다. 호남 지역민과 당원에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선거때마다 특정 정당이 한 지역을 모두 휩 쓰는 행태는 반드시 없어져야 할 현상이다. 새누 리당도 늘 호남에 많은 애정을 갖고 있는데, 지역 민들께서 그 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다.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나라를 위해, 새누리당 을 위해 애쓰는 당원들께는 늘 고맙고 미안하게 생각한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사진=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최경환·최양희 청문보고서 채택

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각각

기재위는 이날 최경환 후보자에 대해 새누리당 의 '적격', 새정치민주연합을 포함한 야당의 '부적

보고서에서 새누리당은 "후보자의 경제철학이 나 정책, 경제에 대한 경험 등을 고려할 때 적격하 다"는 평가를 했다. 그러나 야당은 "후보자의 확장 적 재정정책과 관련, 재원마련에 대한 구체성이 떨

적했다"며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 분야에서 보여 준 리더십과 추진력은 미래부의 현안을 해결하는 데 부족함이 없다"고 평가했다.

반면 부적격 의견으로는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

무설치 문제에서 답변이 오락가락했다"며 "준법 성 · 도덕성 · 전문성 측면에서 근본적인 흠결을 보여 창조경제의 컨트롤타워를 이끌기에는 부족하다" 는 주장이 나왔다.

이로써 전날까지 국회 상임위의 인사청문회 절 차를 거친 박근혜정부 2기 각료후보자(국정원장 후 보자 포함) 7명 가운데 최경환, 최양희 후보자를 포 함해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5명 에 대해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됐다.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 정종 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 2명에 대해서는 야당의 반대로 아직 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다. 또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 문회는 이날 진행 중이지만 야당에서는 부적격 입 장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이날 박근혜 대통령이 야 당의 이들 3명에 대한 재고 요청에 대해 "참고하겠 다"는 입장을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인사청문회…2기 내각 8명 중 5명 '통과' 3명 '불투명' 국회 기획재정위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 및 농지법 위반 의혹이 있으며 통신사 감청설비 의

채택했다. 격' 의견을 병기해 청문보고서를 통과시켰다.

어진다 "는 의견을 제시했다. 미방위도 보고서에서 "최양희 후보자는 한국전 자통신연구원 센터장, 삼성미래기술육성재단 이사 장, 한국정보과학회 회장 등을 역임해 전문성을 축

김기춘 "재난 컨트롤 타워는 중대본"

국가 재난 위기시 청와대 역할 둘러싸고 공방

세월호 국조특위 청와대 기관보고

국회 '세월호 침몰사고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청와대 비서실·국가안보실, 국무총리실, 국가정보 원 기관보고에서는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의 역 할을 둘러싸고 공방이 벌어졌다.

정의당 정진후 의원은 "대통령 훈령 318호 국가 위기관리 기본지침에는 국가안보실이 재난 분야 위기에 관한 정보상황 종합 관리업무를 수행한다 고 돼 있다. 이 말은 모든 재난에 대해 모든 상황을 관리하고 지휘·통제한다는 의미"라며 청와대가 재 난·재해의 컨트롤타워라고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도 "2010년 만든 재난 사고 매뉴얼에 따르면 국가안보실장이 컨트롤타워 기능을 한다"고 거들었고, 우원식 의원은 "컨트롤 타워 역할을 제대로 못한 김기춘 비서실장이 물러 나야 한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반면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14조를 보면 안행부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 부를 두고 본부장은 안행부 장관이 맡는다. 대통령 이 본인 책임임을 통감한다고 발표한 것은 대통령 으로서 도의적·정치적 책임을 말하고, 재난의 컨트 롤타워 권한은 법률상 안행부장관에게 있다"라고

이에 김기춘 실장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하면 재난의 최종 지휘본부는 안행부(안전행정 부) 장관이 본부장이 되는 중앙재난대책본부장"이 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일반적 의미로 청와대가 국정 중심이

니까 그런 의미에서의 컨트롤타워라면 이해가 되 지만 법상으로는 중앙재난대책본부장"이라고 선 을 그었다.

김 비서실장의 이런 언급은 세월호 참사 당시 김 장수 국가안보실장이 재난 컨트롤타워와 관련해 밝혔던 발언과 비슷한 취지다. 당시 김장수 실장은 청와대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이라는 비난여론에 직면했고, 결국 교체된 바 있다.

사고 당시 청와대가 사고 상황을 지휘 · 통제했느 냐는 물음에는 "청와대 상황실에서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고 확인해서 대통령께 보고하는 역할이었 지, 구조를 지휘한 일은 없다"고 부인했다.

이어 중앙재해대책본부 등 범정부 대책기구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했느냐는 질문에 "최선 을 다 했겠지만 만족스럽게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 는다"면서 "너무나 안타깝고, 제대로 일을 못했 다"고 평가했다.

청와대가 방송 뉴스보다 사고 파악이 늦었다는 지적에 대해 김 실장은 "SNS와 매체가 발달해 행 정기관보다 더 빨리 언론기관에서 파악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이게 다 개선돼 국가재난통신망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비서실장은 또 세월호 참사 원인으로 "가장 나 중에 탈출해야 할 선장·선원이 제일 먼저 탈출하고 승객을 대피시키지 않은 게 첫 번째고, 탐욕에 젖은 기업과 국가공무원의 태만도 있었다"고 답했다.

세월호 국조특위는 청와대 등 개별 정부기관을 상 대로 한 기관보고를 이날로 매듭짓고, 11일에는 종 합정책 질의를 벌일 예정이다. /박지경기자 jkpark@

